

‘美 우선주의’ 한목소리… 중산층 강화 vs 부자 감세 충돌

〈해리스〉

〈트럼프〉

민주당 vs 공화당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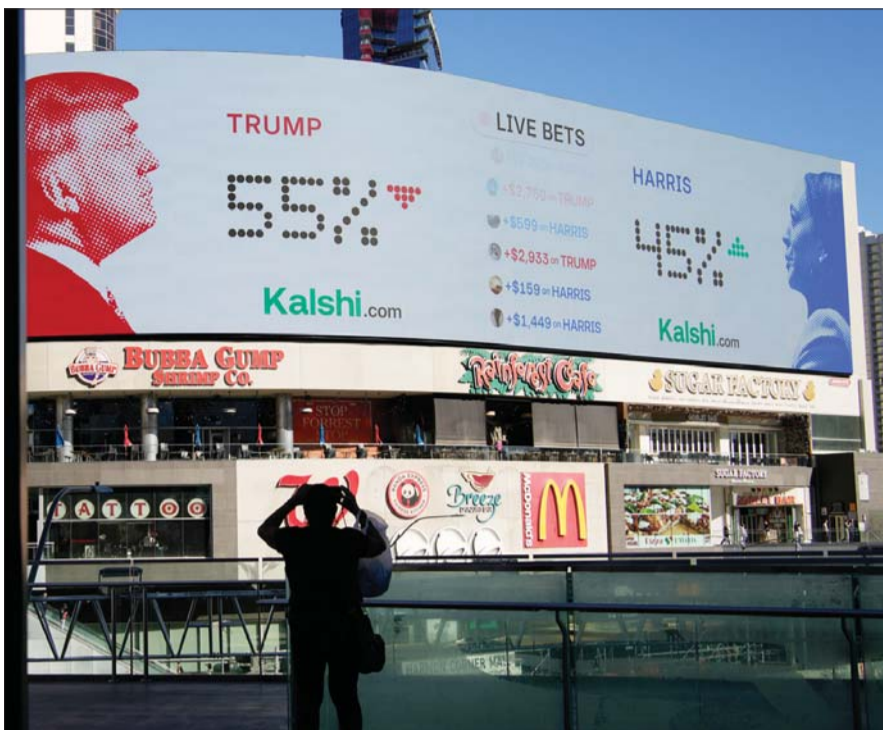
해리스 ‘기회경제’ 토대 중산층 공약 자녀 세액공제 등 중산층 1억명 감세 트럼프, 법인세 21%→15% 인하인 ‘反 이민 정부’로 일자리보호 천명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강화될 것이라 관측이다. 두 후보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경제, 외교 등 다수 분야에서 극단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보호 무역주의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반면, 계층별 선호도에서 보듯 두 후보 간 경제 정책은 명확히 엇갈린다. 해리스 후보는 중산층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중산층 강화 공약을 내놨다. 이와 달리 트럼프 후보는 백인 고소득자, 기업가 등 소위 ‘부자감세’라 일컫는 법인세 인하 카드를 내걸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두 후보 중 누가 집권해도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올해



4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남성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배팅 배당률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AP 뉴시스

도 증가세여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박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과의 패권 다툼도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부과되는 관세 정책만 봐도 두 후보는 대동소이하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이미 집권 시절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경험한 바 있다.

한국,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도 대대적인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보다 강한 관세 부과책을 들고 나왔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최대 20%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대 60%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후보도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 무역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등 중국의 전략 산업 관련 물품에도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미국내 공장 건설 추진도 지속할 전망이다.

◆중산층 감세 vs 법인세 인하

흑인, 여성 그리고 중산층, 해리스 후보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해리스 후보는 ‘기회 경제’를 토대로 한 중산층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녀 세액공제를 3600달러로 늘리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1억명에게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등 고소득층 대상으로 강력한 증세를 선언했다.

반대로, 백인 남성, 고소득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경우 법인세 대폭 인하로 맞서고 있다. 법인세는 이전 집권 당시 21%까지 내린 것인데도 15%까지 인하안을 내놨다. 소위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세에 나설 방침이다.

낙태권도 해리스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낙태권을 인정할 관건인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된 이후 20여개 주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 또는 제한됐다. 이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후보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앞세워 반(反)이민 정서로 지지층을 모으고 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외교 부문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경우 바이든 정부의 기존대로 동맹 중심 다자주의가 예상된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이미 상당한(sizable) 규모로 내고 있다’고 말해 한국계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이전 집권 때처럼 고립주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한국이 미군 병력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또, 방위비 분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전 1기 행정부 때처럼 세계무역기구(WTO)를 비판하고,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시도하는 등 철저한 ‘미국식 고립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1면 ‘고령화된 인력…’서 계속

공정위 “전세 사기에도 보증취소?… HUG 약관 고쳐야”

HUG 관련약관 시정 권고 “임대인 귀책사유만으로 조항 깨져 약관법 위반… 고객에 불리한 조항”

앞으로 주택 임차인의 잘못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가 HUG 임대보증금 약관을 심사한 이유는, HUG 보증을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깡투자’로 주택 190채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HUG가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했고, 피해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피해자 일부는 HUG와 전세

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HUG와 유사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의 경우, 약관을 통해 사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HUG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하고, 민간임대주택법령 규정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

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고 봤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되므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진만·남석우 등 DS 사장단 ‘물망’

한진만 부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디램 설계 연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스타트업 창업과 미국 반도체 기업 근무했다. 이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으로 합류, 설계·개발·기획 등을 두루 거쳐 2022년부터 북미 사업부를 맡고 있다. 한부사장은 메모리사업부와 파운드리사업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석우 사장은 반도체 공정개발 및 제조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연세대 세라믹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1988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반도체 연구소에서 메모리 전제품 공정개발을 주도해왔다. 파운드리에서 TSMC와 벌어진 점유율 격차를 좁히는 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장덕현 대표는 반도체 개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대표직을 맡으면서 다양한 제품의 기술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과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석박사로 학업을 마쳤다. 이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솔루션개발실장, 시스템 LSI사업부 LSI개발실장, SOC개발실장, 센서사업팀장 등을 역임했다.

다만, DX(원제품)부문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이 선방하며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사내이사 중 한희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상속세율 인하, 자녀 공제금액 대폭 확대할 것”

대통령실,尹 임기반환점 브리핑

대통령실은 5일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 정책성과 소개’ 브리핑을 가졌다. 성실장은 이 자리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는 낮은 세율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상속세 인하 기조를 설명했다.

또 성실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

제개편에 대해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 추가 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

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주주총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대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